

중기중앙회-이해찬 與 대표 간담회

# “규제혁신 위해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규제개혁시도지사회’ 구성 제안  
은산분리 완화로 금융업 추가 인가  
규제혁신 5법 등 우선통과 시켜야

중소기업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지방분권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며 (가칭) ‘규제개혁시도지사회’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차관급 조직인 중소기업 읍무즈만을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콘트롤타워’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은행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규모 은행업도 추가 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균형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계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줄 왼쪽 7번째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여당과 중소기업계간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측이 먼저 ‘러브콜’을 보내 성사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호나 당 대표비서실장 등이 두루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김경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2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중소기업계는 전날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평화당 대표 등을 잇따라 방문,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등과 업계 현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

본회의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규제개혁·민생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박성택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과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한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관광, MI 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기반마련도 필요하고, 또한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권한을 지자체로 쥐어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 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을 우선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부문·의료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원격의료·영리병원, 공유경제 기반 서비스, 금융시장 진입규제 등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소매금융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도 필요하지만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 해소, 사업성 위주의 평가, 각 업종별 신용평가 모델 등이 도입된다면 기업금융부문에서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된 소규모 은행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변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위장전입 정황 몰라 송구... 투기목적 없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바른미래,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해 생각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익 추구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이 이어졌지만, 법관 역시 위장전입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상을 남기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장전입 의혹을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등 관련 의혹 8가지에 대응해야 했다.

이 후보자는 “직장 생활 하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겨 놔다”며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자신과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모로 이전했고, 당시 사춘기였던 딸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점 등을 거론했다. 아들이 방학 기간 외가에 있었고, 본인도 친정에 자주 갔다

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

전날 열린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관련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상습적인 위장전입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모님의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간 3억4500만원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기준 상 낙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첫째 아이의 사립초등학교 입학과 둘째의 사립초등학교 주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첫째의 경우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지만, 둘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말해줬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에 이은애·이석태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기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진 후보자는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동기가 필요없어, 본회의 표결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다. /이범중 기자 joke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 “북핵 폐기위해 북미정상 통 큰 결단 필요”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70년 적대관계 불신 거둬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간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면서 “북미 간의 진정한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 “북미 간의 대화와 소

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두어 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이를 제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넘겼다.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의 일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김승호 기자

# 정부, 4년내 민간일자리 10만개 만든다

내년 예산 6187억 투입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 걸쳐 민간 일자리 10만1000개를 만드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에 6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청년고용 효과가 크고, 지식재산 분야는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을 첨단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와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바이오헬스 벤처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2022년까지 연간 창업기업을 900개로 확대한다. 2015년 창업 규모는 700개 수준이었다.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우수인력을 1만명 양성하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 정밀·재생 의료 등 미래 신기술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를 지난해 14만4000개에서 2022년 18만6000개로 4만2000개 늘릴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